"어린이집·유치원 교육, 차별 없어야"

이병철 도의원, "유아교육 관련 지원 격차 해소 위해 전북교육청 차원 지원책 마련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7)은 지난 5일 진행된 제4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정책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지난 30여년 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지만, 오랜 기간 관련 기관이 이원화되며 각각의 정책들이 고착화되었고, 여러 이해관계가 뒤섞이며 본래의 목적인 아동에게 수준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해 차별 없는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다행히 이번 정부 들어 유보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는 있지만, 그 과정은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선도사업을 추진 중인 도 교육청의 경우 한쪽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전북 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유치원 무상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증액시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키우고 있어 현재 도교육청의 유보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병철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그 부담을 감내하고 해결해야 하는 역할은 유보통합을 책임지고 담당해야 하는 도 교육청이라는 사실을 교육감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하며, 도 교육청의 유보통합 원칙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들이 겪고 있는 급간식비 격차와 관련해 현재 유치원의 경우 원아(3~5세 기준) 1인당 단가가 3,500원(여기에 친환경 급식비 지원금 340원이 별도 추가 됨)인 반면 어린이집 아동들의 지원단가는 1,000원으로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선도교육청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지원단가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도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325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2,69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고, 인천교육청 역시 1,000원을 지원하고 있어 도교육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에 이병철 의원은 교육감에게 어린이집 영아에 대한 급간식비(250원)와 유아(1,000원)에 대한 급간식비 단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기관의 차이로 인해 급간식비 지원 단가가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 정상적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따져 묻고,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단가 증액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거석 교육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보육 업무 이관 계획에 따라 보육 사업의 유사성,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별도 사업으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 구조를 재구조화할 예정"이라며,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비와 어린이집 무상보육료에서 발생되는 차액은 교육청과 도청의 전북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해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만호 기자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장과 간담회 지난 5일 전주 중화산동 한일관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도내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인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신충식 예수병원장, 서일영 원광대병원장, 조준필 군산의료원장, 오진규 남원의료원장, 박철완 정읍아산병원 행정실장 등이 조찬간담회를 갖고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 반드시 관철"

민주 전북자치도당, 8일 전북도민대회 개최
전북대 구정문서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윤석열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전북도민대회를 8일 오후 4시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연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도당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해병대원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됐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정하고 재발의했다.

지난 6월 1일 서울역 앞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 이후, 22대 국회와 더불어 길거리에서도 국민과 함께 싸워 반드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다짐으로 전국을 돌며 투쟁하기로 했으며, 가장 먼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한다고 도당은 밝혔다.

이번 전북도민대회는 전북의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주최하며,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정의자유해병연대 김규현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한다.

한편, 채수근 해병은 남원 출신이며, 원광대학교 재학 중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순직했다. /이만호 기자

재해피해 농어가 보상·지원 현실화

민주 윤준병 의원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 대표발의

최근 냉해·우박·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은 생계·구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도적 보장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재해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은 재해로 인한 농어가들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통해서는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전을,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통해서는 소득 보장을 담보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수령받은 보험금이 현행법상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정부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100분의 20 이상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어가도 재해 피해 시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서예비엔날레 총체적 부실 뿌리뽑아야"

이수진 도의원, "조직위 위법행위 감사·비엔날레관 건립사업 재검토" 주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41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이하 서예비엔날레) 조직위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 등의 시정조치 및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공문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조직위에서 받은 계약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A가 전광판 계약 건의 계약서와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에 날인이 되지 않은 원본에 날인 한 부분만 오려서 붙인 것을 발견했다. 이는 명백히 자료를 위조한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집행위원장이 허위로 진술한 문제도 꼬집었다. 올해 초 서예비엔날레 조직위 상반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집행위원장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2021년 3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집행위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거짓 진술한 꼴이 됐다.

아울러, 전북연구원이 진행한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물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자치도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용역의 중요 부분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 4건을 다시 재위탁했다.

그리고 외부에 맡긴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가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외부업체에서 수행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는 0.9659로 B/C비율이 1.0을 넘지 못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은 중앙투자심사심의 대상 사업으로 경제적 타당성조사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경험이 많은 외부 업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안호영 의원, "완주군 농촌협약 공모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4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사업비 36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완주군 농촌협약 사업은 국비 219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62억원이 투입되며, 북부 생활권 6개면(고산, 비봉, 화산, 운주, 동상, 경천면) 을 중심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문화, 복지, 체육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완주군 농촌협약 사업은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이 경천면 행정복지센터 노후화나 운주면 말골재 인근 돈사 악취문제 해결 등 고산 6 개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을 안호영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군 농촌협약 사업을 22대 총선 당시 총선공약에 포함시켰고, 이후 서남용 의장과 완주군의회 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사업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했다.

안호영 의원은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으로 완주 고산 6개면 농촌지역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침체된 고산 6 개면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편의시설 개선 등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완주군은 군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의견을 반영해 고산 6 개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2 월까지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5 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교육청, 청렴도 쇄신 노력 필요"

장연국 도의원

지난 5일 열린 제41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인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서거석 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2년간의 정책성과에 대한 엄중한 평가와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 개선 대책, 조직개편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장연국 의원은 먼저 "최근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평가 등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 각 부처 평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평가(2022년 보통, 2022년 우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2022년 라 등급, 2023년 다 등급),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전국 17개 교육청 10개 교육청이 최우수 등급이나 도교육청은 그 하위 등급), 학교 흡연 예방사업 평가(전북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청소년 흡연율이 높음) 등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평가는 모든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에 있다고 꼬집었다.

장연국 의원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 2등급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으나, 2019년 4등급으로 떨어졌고, 서거석 교육감 취임 시기인 2022년 4등급, 2023년 역시 4등급으로 전북교육 청렴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는 서거석 교육감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급하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또한 2023년 실시된 조직개편과 관련해 2국에서 3국으로 개편한 성과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장 의원은 3국 체제 전환 이후 운영 성과에 대해 물으면서 실제 업무는 개편 전인 2022년 업무담당이 52개에서 2024년 66담당까지 늘었다며, 본청 조직 슬림화 공약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직 슬림화와 조직업무 증가에 따른 본청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더 높아졌다는 지적과 함께 조직개편이 본청 위주로 이루어져 그 효과가 교육지원청에서부터 각급 학교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며, 전북교육청 전체 조직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스마트 칠판 등 디지털 교육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각급 학교에 보급된 스마트 칠판 수리 현황을 조사했고, 수많은 기기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밝혔다.

하지만 장 의원의 자료요청 전 본청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교육청의 디지털 기기 사후관리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만호 기자

"반복되는 갑질,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 필요"

염영선 도의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탐방 등 참여 기회 확대도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이 지난 5일 열린 제41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염영선 의원은 도정 운영과 관련, 김관영 도지사에게 "반복되는 갑질 사태를 지적하고 실효 없는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갑질 근절을 위한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작년 갑질 사태가 발생했고, 집행부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갑질 관련 논란이 계속돼 결국 대형사고가 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실효성 없는 대책을 만들기보다는 근절을 위한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130년 전 전북에서 시작된 위대한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근거가 될 조례가 없어 1년간 준비해 조례를 발의했지만, 집행부가 유족수당 지급을 반대했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또한, "연 1억6,000만원 가량의 예산으로 동학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름 없이 스러져 간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유족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염영선 의원은 교육·학예 행정과 관련, 서거석 교육감에게 "2024년 기준 학생 해외연수 예산은 124억원인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역사문화체험 등 도내 역사 유적지 연수 비용은 1억3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전북의 학생들이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견문을 넓히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지역의 소중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도내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초중고 교육과정 중 한 번쯤은 전북의 자랑인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탐방하고 그 가치를 느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